

통일과 이데올로기

金 潤 煥*

〈 目 次 〉

- I. 歷史的 大轉換期の 새 統一觀 摸索
- II. 南北韓의 統一觀과 그 吟味
- III. 兩體制의 歷史的 實驗과 選擇
- IV. 새 統一觀과 經濟學의 領域

I. 歷史的 大轉換期の 새 統一觀 摸索

해방 50년, 분단 50년을 계기로 後産業社會로의 역사적 대전환에 대응한 세계화와 선진화, 지방화, 정보화방향의 制度改革과 정책전환이 우리의 중대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변화는 통일환경을 변화시켰고 통일에 대한 주체적 노력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하여 새 통일관의 모색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통일에 관한 종래의 냉전논리에 입각한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냉전적 대북관을 바꾸는 의식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도 탈냉전시대의 새 질서확립의 방향에서 대결보다 공존으로 통일에 접근하는 새 통일관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현재 정치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총체적 위기 특히 경제난에 봉착하고 있다. 북한은 체제유지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개방·경제개혁을 도모하고 특히 南北經濟交流를 확대하면서 사회주의 노선의 새 역사적 조류에 따른 自己變化를 일으킬 것인가. 아니면 억압과 내핍을 강요해 온 지금까지의 우리식으로 버티고 살면서

* 고려대 명예교수, 본학회 명예회장

지속적인 강경노선을 유지하다 경제적 자생력을 상실하여 붕괴할 것인가. 북한은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 북한은 후자보다는 전자의 길을 택해 구소·동구의 전철을 밟지 않으면서 자멸보다는 재생의 길을 열 것으로 보인다. 그 단적인 예가 미국의 대표적 다국적기업인 코카콜라의 북한진출이 될 것이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미·일에 접근하여 경제회복을 도모하면서 남북경제교류를 제한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기보다 북한경제를 도와 먼 장래의 통일기반을 성숙시킨다는 견지에서 경제교류를 촉진해야 한다.

우선 통일문제의 접근은 남북한이 내외적으로 처해 있는 실상에 대한 정확한 狀況判斷(situation judgement)이나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향과 과제 제시를 위한 價値判斷(value judgement)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간 이러한 판단을 그르치게 해 온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반공을 앞세운 사이비 자유민주주의 내지 국수적 민족주의 사상이다. 6·25동란의 참상에서 비롯된 반공주의에는 수궁이 가지만 지나치게 강조된 반공사상은 그간 자유로운 통일논의나 의사표시를 위축시켰을 뿐 아니라 감정이 앞서 남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하는 상황판단을 그릇했을 뿐 아니라 통일의 방향과 정책을 옳게 제시하지 못했다. 이것은 오늘날 다각적인 대북방교류를 확대하고 세계화전략을 내세워 21세기 선진화를 달성하려는 國是와 어긋나는 것이다.

둘째로 교조적·공식적인 공산주의사상이나 그 밖에 각종 급진적 이데올로기도 환상적 이상에 젖어 독단주의에 빠짐으로써 그릇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 통일논쟁은 가치판단의 대립보다도 상황판단의 차이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로 일반국민 대다수의 통일논의에 대한 체념이나 무관심이 바른 통일논의, 바른 통일관을 公論化하지 못하는 면도 간과할 수 없다. 남북분단이 그 당시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따라 타율적으로 이루어졌고 따라서 통일도 우리의 노력보다 타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통일논의를 체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휴전 후 40여년 동안 남북한간의 대립·갈등은 있었지만 전쟁없이 평온상태를 유지해 오는 가운데서 국민들의 통일에 관한 무관심이 습관화되었다. 이리하여 통일논의가 통일문제 전문가나 통일꾼의 전유물이 되었다.

넷째로 역대정권은 민족의 절실한 염원인 통일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어 통

일문제를 크게 내세우고 있지만 정권안보차원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았고 그것이 도리어 자유로운 통일논의를 저해하고 때에 따라서는 통일논의를 이적행위로 몰아세우는 경우도 많았다.

어쨌든 남북한은 각기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를 취하면서 발전되어 왔고 서로 이념과 체제의 차이로 해서 대결하여 왔다. 사실 이러한 차이가 통일의 최대 애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産業社會의 산물이고 20세기에 두 체제는 실험을 통해 그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드러냈다. 즉 자본주의는 자유, 효율, 개인과 같은 個人本位의 가치계열은 살리지만 평등, 공정, 집단과 같은 社會本位의 가치계열은 살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보장하였을 뿐이다. 이에 대해 사회주의는 자유와 같은 개인본위의 가치는 살리지 못했지만 평등과 같은 사회본위의 가치는 다소 문제는 있지만 실현했다고 볼 수 있다. 양 체제의 실험을 통해 얻은 성과와 문제점을 토대로 경제성숙화에서 오는 문제점, 인간계와 자연계와의 불균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감안하면서 21세기의 후산업사회화에 대응하여 자유와 평등이 양립되는 사회연대주의 방향의 새로운 사회이념, 체제, 정책이 모색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남한은 자본주의적 공업화방식을, 북한은 사회주의적 공업화방식을 취하여 체제실험을 했다. 이것은 동족상잔의 6·25동란을 비롯하여 동일민족간의 대립·갈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기도 했고 2국가 2체제이긴 하지만 한반도를 전근대적인 농업국가에서 근대적인 공업국가로 바꾸어 놓은 긍정적 측면을 나타나게 했다. 세계의 역사는 거역하기 힘든 힘에 의해 냉전시대에서 탈냉전시대로 바뀌고 있으나 한반도에만 아직 냉전기류가 서리고 있다. 우리도 냉전기류를 몰아내 대결·갈등의 냉전논리에 입각한 낡은 통일관에서 벗어나 화해·협력의 탈냉전논리에 입각한 새 통일관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써 남북관계의 부정적 측면을 해소하고 긍정적 측면을 키워 남북이 함께 부강해지면서 통일여건을 성숙시키고 통일한국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을 것이다.

II. 南北韓의 統一觀과 그 吟味

통일은 21세기를 향한 현단계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과제로 제기될 뿐 아니라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민족의 절실한

요청이다. 통일은 단일민족의 분열에 의한 상호적대시를 좌시할 수 없다던가, 이산가족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한민족의 단일성회복으로 분단시대를 청산하여 소모적인 갈등·대결에서 벗어나 민족의 발전·번영을 가져올 새 활로를 열자는 데 보다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은 서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테올로기가 통일관이 달라 평화적인 남북통일이 어려운 것이다. 남북한의 통일이테올로기가 궁극적으로 민족의 통일, 발전, 번영을 가져올 민족주의라 하더라도 그 내용은 각기 다르다. 북한은 남반부 인민의 해방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는 주체사상에 입각한 프롤레타리아 민족주의를 통일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계급해방론의 통일관은 남한이 사회주의체제의 방향으로 변질하여 북한이 남한을 사회주의체제로 흡수하는 사회주의적 흡수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한국의 통일관은 근대적 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모든 민족이 화합단결하자는 범계급적 민족화합론의 통일관으로서 부르조아민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북한을 자본주의체제로 흡수통일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의 냉전논리에 입각한 통일관은 논리적으로 하나로 수렴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통일의 사회적 비용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흡수통일보다는 평화적·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평화통일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이 일반적인 공통견해이다. 통일논의는 통일과정에 관한 논의가 되겠으나 통일 후에 야기될 문제점까지도 헤아리면서 문제삼을 필요가 있다. 한 연구는 통일은 세 가지 조건이 함께 충족될 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첫째는 북한의 변화, 둘째 우리의 통일성취능력, 셋째 국제환경이다.¹⁾ 변화와 성취능력은 남북한에서 다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고 국제환경은 통일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통일을 순수하게 논리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다음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즉 ① 북한의 국가체제가 소멸되고 한국의 주권이 북한영역으로 확대되는 통일 ② 그 반대의 통일 ③ 서로 타협하여 새로운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통일 ④ 정치통일을 유보한 채 두 사회의 실질적 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장기공존관계의 지속 등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²⁾ 첫째는 흡수통일, 둘째는 남반부

1) 延河淸外, 統一展望과 「한민족共同體」 구상, KDI, 북한경제연구센터, 1993. 9, p. 2.

2)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21세기의 한국, 1994, p. 1197.

해방, 셋째는 예멘식통일인데 이러한 방식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넷째는 진화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남북공존체제 하의 교류·협력을 통해 기능적 통합을 해나가면서 각기의 체제의 진화를 겪으면서 무리없는 정치통합이 가능해질 때 통일을 완성하는 경우이다. 현실적으로는 어떤 방향에서 통일이 이룩될지는 헤아리기 어렵지만 이기는 통일보다 함께 사는 통일을 바란다면 장기적으로 네번째 방향에서 탈냉전시대의 통일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그간의 남북한의 통일론은 각기 상대방을 흡수하려는 것으로써 평화적·민주적인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북한의 고려연방공화국창립이란 연방제 통일방안의 골자는 ① 남과 북에 현존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원칙에 따라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 ② 남과 북에 같은 수의 대표를 뽑고 적당한 수의 해외 대표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이 연방회의가 연방정부격인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상설위원회가 남과 북의 지역자치정부를 지도할 뿐만 아니라 군사권과 외교권을 비롯한 전반적인 이익에 관계되는 사업을 관할토록 한다. ③ 연방이 성립되면 각 분야에서 교류 협력의 증대, 민족연합군의 창설 등 10대 시정방침을 우선 실행해 나간다는 것이다.

북한측은 또한 이러한 연방제의 실현에 앞서 ① 남조선에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팻쇼적인 악법을 폐지하고 모든 폭압통치기구를 없애야 한다. ②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을 합법화하고, 모든 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③ 남한에 현존하는 정권을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이익을 옹호하며 대변하는 민주주의적 정권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미국은 분열주의적인 두 개 조선정책을 더 이상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주한미군은 철수시켜야 한다. ⑤ 우리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등의 선결조건을 제시해 놓고 있다. 요컨대 북한측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은 한반도의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정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두고 하나의 민족이란 토대 위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이념과 제도 아래 두 개의 지역자치정부로 구성되는 연방국가형태로 통일하자는 것이다.³⁾ 이러한 이질적인 두 체제가 그대로 통일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나 실제로나 불가능한 것이다.

3) 통일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991, pp. 50~52.

그리고 북한의 연방제실현의 선결조건은 남한체제를 북한체제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편해 놓고 연방구성을 위한 협상을 하자는 것으로서 남조선혁명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자는 정치적 포석인 것이다. 연방제통일방안은 1 국가 2체제 2정부로 하자는 것으로서 통일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남북간에 사상, 이념, 체제상의 차이가 현격하다는 현실 인식의 바탕 위에서 남북연합이라는 징검다리를 거쳐 정치·사회적 통합을 이룩하자는 점진적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즉 남과 북은 우선 서로의 이념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통해 공존 공영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가운데 잃어버린 민족공동체를 되찾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끝내 7천만이 하나가 되는 통일된 국가를 실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4)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남북한의 통일방안 비교

구 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고려민주공화국 창립방안
통 일 원 칙	자주, 평화, 민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전 제 조 건	없음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주의 활동 합법화, 주한미군 철수 등
과 도 체 제	남북연합	없음
과 도 기 구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없음
통 일 국 가 실 현 절 차	통일헌법에 의거한 총선거	연석회의의 방식으로 연방제 실현방법 협의, 결정
통 일 국 가 기 구	양원제 국회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
통 일 국 가 정 책 기 조	민주공화체제, 민족성원 모두의 복지증진 민족의 항구적 안전보장 외국과 선린우호관계 유지	자주적 정책실시, 민족경제 발전보장, 민족문화 교육의 통일적 발전, 민족연합군 조직, 평화애호적 대외 정책 등 10대 시정방침
통 일 국 가의 형 태	자유·인권·행복이 보장되는 단일 민주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형 중립국가

자료 : 통일원

4) 통일원, 앞의 책, pp. 57~58.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중 상호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통해 공존공영의 기반을 다져나가자는 것은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특히 경제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것으로써 통일의 경제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남북한 경제교류협력방안은 그 기본목표를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하고 통일경제의 발전잠재력 및 경쟁력을 극대화하며 경제사회 각 분야의 이질성을 점진적으로 극복하는 데 두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방향은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의 추구보다는 중장기적 기본목표의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⁵⁾ 이것은 단순히 경제교류협력이 아니라 경제적 접근이 경제통합, 나아가 정치통합, 평화통일로 이어질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민족공동체 3단계 통일방안에 따른 남북한 경제통합의 단계별 추진방안을 보면 ① 정치면에서의 화해협력기에 신뢰구축, 신뢰구축을 전제조건으로 한 경제교류협력의 여건조성, 경제교류협력확대를 기한다는 것이다. ② 남북연합기에 북한의 시장경제화, 개혁확대로 남북한 공동시장을 추진하고 경제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③ 통일국가기에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통일국가의 경제체제로 경제·사회통합, 남북한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한다는 것이다. 언제 이러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가상의 한 연구는 ① 교류협력을 하는 共存段階의 安定化 段階(1993-1995), ② 남북연합기의 社會·經濟統合段階(1995-2010), ③ 통일국가기의 政治統合段階(2010-2020)의 단계별 통일추진전략을 세워 2020년경에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民族共同體의 추진은 자주·평화·민주를 원칙으로 자유·인권·행복이 보장된 民主國家를 세우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⁶⁾

이상은 남한의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적 흡수통일론이라 할 수 있다. 어쨌든 민족적 과제인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탈냉전이 이데올로기로 극우적, 극좌적 오류에서 벗어나 유연성있게 이념과 체제변화를 일으켜야 하고 남북한간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의 격차가 해소되어야 하며 서로가 경제적 성숙단계에 도달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통일의 의지와 정열을 드높이는 평화통일문화가 배양되어야 할 것이다.

5) 延河淸外, 北韓의 産業實態와 南北經協, 韓國開發研究院, 1993. 11, p. 1.

6) 延河淸外, 統一展望과 한민족 共同體構想,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원 외, 1993. 9, pp. 32-34.

〈표 2〉 「3段階 統一方案」에 따른 南北韓 經濟統合의 段階別 推進方向

	南北韓 政治關係	南北韓 經濟關係	
		前提條件	經濟協力課題
和解協力期	1.1 南北對話推進 • 기본합의서 채택 •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 5개 공동위 구성 (화해, 군사, 경제, 사회, 문화, 핵통제)	1.1 信賴構築 始作 • 정치·군사	1.1 〈交流·協力の 與件造成〉 • 직교역 전환 • 결제제도, 투자보장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경제교류 해로개설, 통신 연결 〈示範協力事業 推進〉 • 남포공단 등 경공업분야 • 공동어로 조업 • 농작물병해충 정보 교환 공동방제 • 국제관계에서의 협력
	1.2 民族共同體憲章 採擇 • 남북연합으로의 이행준비	1.2 信賴蓄積 • 이산가족 왕래 • 군비감축 • 북한의 중국식 개방 • 개혁의 시작	1.2 經濟交流·協力 擴大 • 교역품목·규모의 확대 및 다양화 • 합작투자의 본격시작 • 다자간 협력사업 본격 • 교통·통신 연결 확대
南北聯合期	2.1 南北聯合機構設置·運營 • 남북정상회의 • 남북각료회의 • 남북평의회 • 공동사무처 • 상주연락대표부	2.1 北韓의 市場經濟化 개혁 확대 • 가격 및 환율 개혁 • 지방소기업, 서비스 등에 개인기업 허용 • 농업부문개혁 • 기업관리체제 개혁 • 계획경제부문 축소	2.1 南北韓 共同市場 推進 • 비관세장벽 완화·철폐 • 서비스교역 자유화 • 대외경제정책 공동보조 • 사회간접자본건설 참여
	2.2 統一憲法 採擇 (남북평의회) • 총선거 실시	2.2 北韓의 市場經濟化 成熟 • 사유권의 확대 • 주식시장의 정착 • 화폐 교환성(경상계정)	2.2 經濟統合 準備 • 경제·사회제도 통합방안 합의
統一國家期	3. 統一民主共和國 • 민족공동체의 완전실현 • 단일국가 • 각자의 자유,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	3. 統一國家의 經濟體制 사적소유제도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함.	3.1 經濟·社會制度 統合 • 조세 및 재정 • 화폐 및 금융제도 • 교육·의료·사회보장 등 사회복지제 • 재산권 확립 및 민영화 3.2 南北韓經濟의 均衡發展 • 국토개발종합계획 • 통일한국의 경제·사회발전 계획 • 남북한 산업구조조정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남북한이 체제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남한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의 체계를 마련하도록 意圖된 시장경제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개혁·개방에 의한 사회주의시장경제화로 사회주의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의도된 사회주의시장경제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사 이러한 체제변화로 양 체제사이에 이질성이 적어지고 동질성이 커진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통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느 편이 주가 되던 평화통일의 기반이 확대되었으므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마찰과 충격이 적은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자본주의체제와 이에 대결하여 20세기에 등장한 공산주의체제는 체제적 실험을 통해 그 공과가 뚜렷해졌고 21세기를 향해 새 질서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 이것이 통일체제구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Ⅲ. 兩體制의 歷史的 實驗과 選擇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하는 兩者擇一型의 문제제기는 오늘날 매우 진부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20세기의 역사적 경험은 자유방임형의 시장경제 이른바 자본주의도 중앙집권적·지령적 계획경제 이른바 사회주의도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흔히 현대자본주의라고 불리는 선진국의 경제체제는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원형의 이념적인 자본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미의 주류경제학자 사이에서는 자유방임형의 시장경제에 관한 낙관론이 유력했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시장기구가 경제의 불균형을 자동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불황은 쉽사리 극복될 것이고 대량의 심각한 실업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론은 1930년대의 대불황으로 무너졌다. 자유방임형 시장경제체제관은 불황과 실업을 극복하는 유효한 정책지침을 제시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절망시키고 폭력혁명을 정당화하는 파시즘이나 공산주의와 같은 전체주의운동을 양양시키고 그것의 일시적 성공을 돕는 결과가 되었다. 몇몇 나라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의 해결을 대외 침략에서 구하는 팽창주의의 국가전략을 선택했다. 국가간의 대립의 첨예화는 전쟁을 유발하고 인류전체에 처참한 살육과 파괴를 가져왔다. 요컨대 시장경제의 자동조정기능

에 대한 사람들의 過信과 자본주의경제체제의 결함을 시정하려는 노력부족이 국제분쟁의 중요한 계기의 하나가 되었다.

20세기는 각종 사회경제체제가 생겨 서로 대립되고 실험해 본 시기이다. 엘리트주도형의 파시즘적 전체주의도 스탈린식 공산주의와 같은 좌익전체주의도 숭고한 이상과 웅장한 계획을 내세워 각기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것들이 한동안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결실없는 종말로 끝났다. 이리하여 살아남은 유일한 체제가 시장경제와 의회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경제체제이다. 그러나 이것이 살아남은 것은 체제가 이상적이거나 우월해서만이 아니다. 어느 정도 현실성, 유연성을 지니고 끊임없이 자기수정을 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 체제가 전폭적인 희망을 걸만한 유일무이한 체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요컨대 시장경제체제는 경쟁을 통한 가격의 기능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조화를 이룰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대기업중심의 재벌경제에 따른 독점이나 과점은 비록 과점적 경쟁을 일으킨다고 하나 가격의 기능마비와 각종 폐해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른 수급불균형과 더불어 장기경제침체, 실업, 빈부격차, 인구와 생산력의 불균형, 자연계와 인간계의 불균형, 정보화혁명으로 촉진되는 카지노경제와 같은 경제적 마찰, 정치와 문화의 퇴폐 등은 근대화가 전제로 한 자연적 조화관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체제에 대신하는 사회주의체제를 취했던 소련, 동구, 기타 나라들의 중앙집권적·지령적 계획경제체제도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와해되었다. 이러한 체제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고 경제적 효율도 보증하지 못하여 사회적 공정의 기초조건을 파괴했다. 이러한 체제 하에는 유효한 경쟁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 생산을 가능케 하는 유인이나 동기도 결여되어 조직적·기술적 혁신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앙집권적·지령적 계획경제는 불가피적으로 정치적, 문화적 통제를 강화하여 특정 독재자의 전횡을 허용하고 국민으로부터 유리된 특권계급을 형성케 한다. 이리하여 소·동구붕괴의 원인은 경제적 실패나 치안유지능력의 상실보다도 사회주의 문화에 대한 실망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회주의의 이념이나 이상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게 되고 당과 행정관료의 인격이나 리더쉽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요컨대 레닌 스탈린주의가 혁명의 열기가 식어감에 따라 퇴색되고 정권을 장악했던 공산당조직이 특권화, 경직화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따라서 북한사회의 본질적인 위기도 그 원인이 경제적 실태나 치안유지능력상 실보다도 공산권의 변화와 이에 따른 북한주민의 사회주의문화에 대한 신뢰감 상실일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사회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문화창조의 방향으로 변신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세기의 심각한 경험은 체제선택에 있어서 인간과 사회를 냉정히 관찰하는 정확한 상황판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제 세계의 역사적 흐름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하는 고정관념으로서의 좌우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 유연하게 자기수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굴레로부터 남북은 벗어나 우리 민족의 통일, 발전, 번영을 가져올 민족주의의 이념 즉 통일이데올로기로 재충전되어야 한다. 이데올로기는 수단이나 방편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이러한 통일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새 통일관을 바탕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새 統一觀과 經濟學의 領域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떤 방향에서 자기수정이 되고 있는가. 서구에서는 파시즘이나 나치즘의 지배가 연합국에 의해 타도된 후 政治的 民主主義의 재건·강화와 經濟民主主義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독일에서는 독점 자본주의에 반대하여 市長經濟原理가 관철되는 체제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는 新自由主義의 社會市場經濟原理를 정책지침으로 하여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났다. 기본이념은 다소 다르지만 제3의 길을 택한다고 하는 스웨덴의 社會民主主義도 이 노선에 가깝다. 1960년대 이후 케인즈형 경제정책의 한계에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한때 보수적인 자유주의가 성행했으나 오늘날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대체로 자본주의체제는 신자유주의노선 또는 社會民主主義路線(非마르크스적)에서 수정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체제도 21세기의 후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크게 변모할 것이라는 것이 드러커 등에 의해 주장되는 後資本主義(post capitalism)이다.

스탈린형 독재체제에 반기를 든 고르바초프는 공산당을 앞세운 마르크스적 사회민주주의(1891년 독일 사민당의 에어폴트강령)를, 엘친이나 동구는 마르크스주의에서 벗어나 비공산당지배 하의 脫마르크스의 社會民主主義路線(1959년 독일 사민당의 바트고데스벨크 강령)을 내세우는 후사회주의(post

socialism)의 방향에서 자기수정을 도모해 왔다. 이와같이 양 체제가 자기수정을 해간다면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국가와 사회주의국가를 구별할 수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국자본주의가 보다 社會權의 基本權을 강화한 신자유주의나 스웨덴형의 비마르크스적 사회민주주의 노선으로 제도개혁과 정책전환을 하고 북한사회주의가 현재체에서 마르크스적 또는 탈마르크스적 사회민주주의 노선으로 전환한다면 남북한의 체제적 동질화와 통일의 공통기반이 생겨 남북한간의 상호 접근, 교류, 협력의 진전으로 평화통일의 길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희생 많은 물리적 통일이 아니라 우리민족에게 활기와 활로를 열어주는 화합의 통일이 될 것이다.

후산업주의(post industrialism)와 세계주의(globalisation)에 대응하면서 우리민족의 통일, 발전, 번영을 기할 개방적 민족주의가 바로 통일이데올로기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생각할 때 21세기를 지향하면서 통일을 이룩할 바람직한 체제와 그 이념 및 정책은 어떤 것이라야 하는가.

어떤 체제든 궁극적, 본질적인 이념은 사회구성원의 복지증진이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첫째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생산증대(分配源泉増大)이고, 둘째 그에 따른 부작용 특히 분배불평등을 시정하는 것(分配制度改善)이다. 전자를 위해서는 자유(정치면), 효율(경제면), 개인(사회면) 등의 個人本位の 價値系列을 살려 자연권적 기본권을 확립해야 하고 후자를 위해서는 평등(정치면), 공정(경제면), 집단(사회면) 등의 社會本位の 價値系列을 살려 社會權의 基本權을 확립해야 한다. 현대산업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효율을 위한 최적자원배분의 원리와 경제정의 특히 분배의 공정성에 입각한 시민사회구성원리인 것이다. 개인본위의 가치와 사회본위의 가치는 양립되지 않지만 역사적으로는 社會連帶主義에 입각한 상호부조로 조화시켜 왔으며 상호부조를 제도화한 것이 사회보장제도이다.

산업사회가 발달하여 부유해짐에 따라 사람들은 물질적 복지보다 정신적인 비물질적 복지를 요구하게 되었고 수요도 케인즈경제학이 과제로 한 需要量이 아니라 개성과 감성 그리고 그 나라의 고유문화가 갖는 需要의 質을 욕구하게 됨으로 경제문화가 발달되어야 한다. 그리고 산업사회가 후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지나친 인구증가와 공업화는 지구적 규모의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을 일으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사회경제체제이든 자연

과 인간과의 공존을 꾀하는 가치로서의 공존원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적으로 국제적 사회연대주의에 입각하여 핵전쟁, 인구폭발, 남북문제, 환경 파괴 등을 공존원리에 입각해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국제적 이념과 국제 질서의 확립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평화통일에 대비한 체제는 세계가 지향하는 체제이념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종합적 입장에서 이미 언급한 여러가지 가치계열이 조화적으로 종합되는 방향에서 기본이념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기본이념에 상응한 체제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자동적 조정기구로서의 시장경제시스템, 정책적 조정기구로서의 민주정치시스템, 합의적 조정기구로서의 참가적 사회시스템의 최적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과 자연의 공생·공존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야 한다. 이러한 경제체제 내의 각 제도의 비중과 기능의 차이에서 체제의 차이가 생길 것이다. 정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조화적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종합적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종합적 시각에서 종합사회지표를 작성하여 종합사회경제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달성키 위한 종합사회경제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복지정책, 환경정책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제기되는데 또한 정보통신혁명에 따른 정책적 과제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지식정보는 새로운 생산요소,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로서도 중요하지만 정책종합화의 도구로서도 크게 활용될 것이다. 장래의 경제사회체제를 구상하는 데 있어서 자산과 소득의 분배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자산의 소유는 勤勞者資產所有重視政策을 취해야 할 것이고 분배문제는 분배공정으로서보다도 경제사회의 안정성장이란 차원에서 중요시 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종합적 시각에 입각한 경제사회의 이념, 체제, 정책은 주류경제학이 경시 또는 무시해 온 많은 문제들을 대상으로 해야 함으로 종합정책을 뒷받침할 경제학은 마땅히 그 영역을 보다 더 넓혀야 할 것이다.

21세기와 통일에 대비한 종합사회경제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통일의 경제학은 통일과정과 통일후의 한국의 미래창조에 유용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결국 당면한 남북경제교류나 단계적인 경제통합문제만이 아니라 후산업사회로 가는 세계경제와 우리경제에서 일어날 문제까지도 해명하고 해결의 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첫째 경제학의 체제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질체제간의 경제교류, 협력,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관한 연구와 아울러 양 체제가 어느 방향으로 자기수정을 하고 해야 하는가를 연구해야 한다. 역사적으로는 개인본위의 자본주의 체제의 결합에서 사회본위의 사회주의체제가 구상되고 등장했으며 이것이 또한 모순을 나타내자 다시 개인본위체제로 회귀하는 세계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체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21세기에 대응한 새로운 체제가 모색되고 있다.

둘째 경제학의 미래지향적·미래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적어도 21세기에는 통일한국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실 속에 싹트고 있는 후산업사회적 요소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미래에 있음직한 있어야 할 경제사회를 구상하면서 이를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정보화, 환경문제, 수요의 질문제, 인간존중경제까지도 연구과제로 하여 경제학의 연구영역을 넓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종합적 관점에서 출발해야 하므로 경제학이 신정치·사회경제학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경제학은 항상 자유나 효율(보수)의 極에서 평등이나 공정(진보)을 추구하는 경제학을 등장시켰고 다시 공정의 극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경제학으로 회귀하면서 발달되었다. 앞으로의 경제학은 1970년대 1980년대를 풍미하던 효율에 중점을 둔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못지않게 크게 공정을 내세워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제문제를 해결해야 할 공정·공존의 경제학으로 발돋움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경제학연구의 시야를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지구촌경제화되고 세계는 냉전종결에 따라 군비경쟁에서 경제경쟁시대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한 나라의 국민경제운영도 부국강병에서 富國富民의 방향으로 기울어지면서 세계경제의 운영원리의 방향에서 조정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민경제를 단위로 한 국민국가시대의 경제학이 세계경제를 단위로 한 경제학으로 발달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가령 드러커는 국가정부기능을 엔진이 아니라 개별경제와 세계경제를 매개하는 기아의 기능을 하는 중간적 주체가 되어야 하고 이런 방향에서 경제학이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한 나라나 한 민족은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살리면서 고유문화를 살려 산업의 문화화와 문화의 산업화로 민족문화의 특수성을 살려 세계경제 속에서 자기몫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대산업문명을 지배해 온 가치체계는 인간의 집합성보다는

인간의 개별성을 내세우는 개인적 인간유형을 바탕으로 한 패권국가의 영미의 가치체계였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산업문명의 모순·갈등에 따른 가치체계의 혼돈은 아시아태평양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새로운 가치체계를 요망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개별성과 더불어 집합성을 살리려는 동양적인 집합적 인간유형을 포괄한 전인적 인간유형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것이 새 산업문명과 새 국제사회질서를 마련하는 기본이념의 원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학도 이것을 도입하는 방향에서 새로워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